언론인 초청 국정과제간담회
(플라자호텔 4층 난초홀)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2004. 12. 17(금)

정 책 기 획 위 원 회

◇ 목 차 ◇

1.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 1

2. 참여정부 국정운영방식 2

3. 국정과제위원회 구성과 장점 4

4. 국정과제위원회 운영현황 5

5. 주요 추진실적 6

<별첨1> 국정과제위원회 현황 9

<별첨2>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현황 10

<별첨3> 국정과제 관련 주요 개혁입법 추진현황 14

1.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비전 : 혁신과 통합의『균형발전사회』

□ 성장과 분배, 인간과 환경, 지역간, 성·계층·세대간,
정부-시장-시민사회의 균형 등으로 **균형발전사회의 기반** 구축

○ 하향평준화가 아닌 **총체적 상향운동의 발전사회** 지향

※ 기존의 불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새로운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유효성을 상실

□ 균형발전사회의 양대 축으로 **"혁신"과 "통합"**을 설정,
한국 경제사회의 **역동성과 안정성** 확보

○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 지역·계층간 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인간적 삶의 여건 조성을 통해 **사회적 통합기반** 구축

(2) 분야별 정책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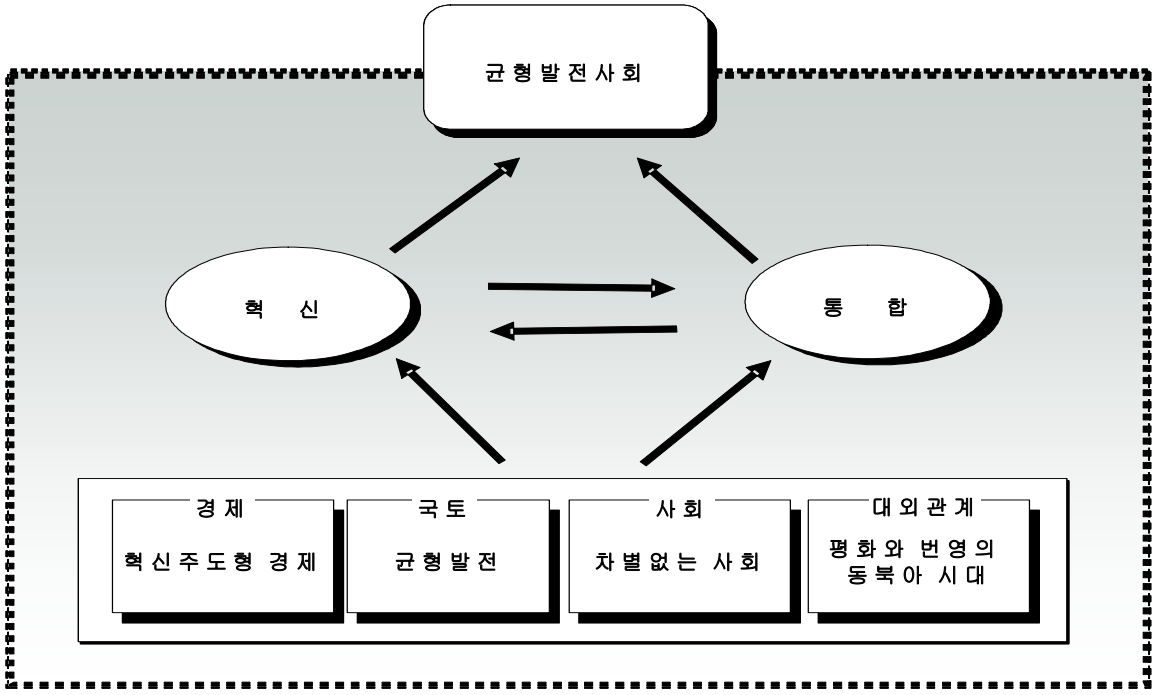
□ 경제 :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구축

□ 국토 : 국토 대개조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사회 :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차별없는 사회** 구현

□ 대외관계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

(3) 5대 실천전략 : 지속적 개방·개혁, 지방화·국토균형발전, 사회통합·차별시정, 長期주의, 原則의 정부



2.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식

(1)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달성해야 할 비전과 전략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

□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및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

(2) 국가전략과제 추진 패러다임을 『參與型』으로 전환

□ 참여형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조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정과제위원회』**를 설치·운영(별첨1)

○ 100대 국정과제(별첨2)의 기획단계부터 정부부처,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신뢰도 제고**

※ 논의 및 결정단계 : 실무TF ⇒ 전문위⇒ 본위원회⇒ 대통령주재「국정과제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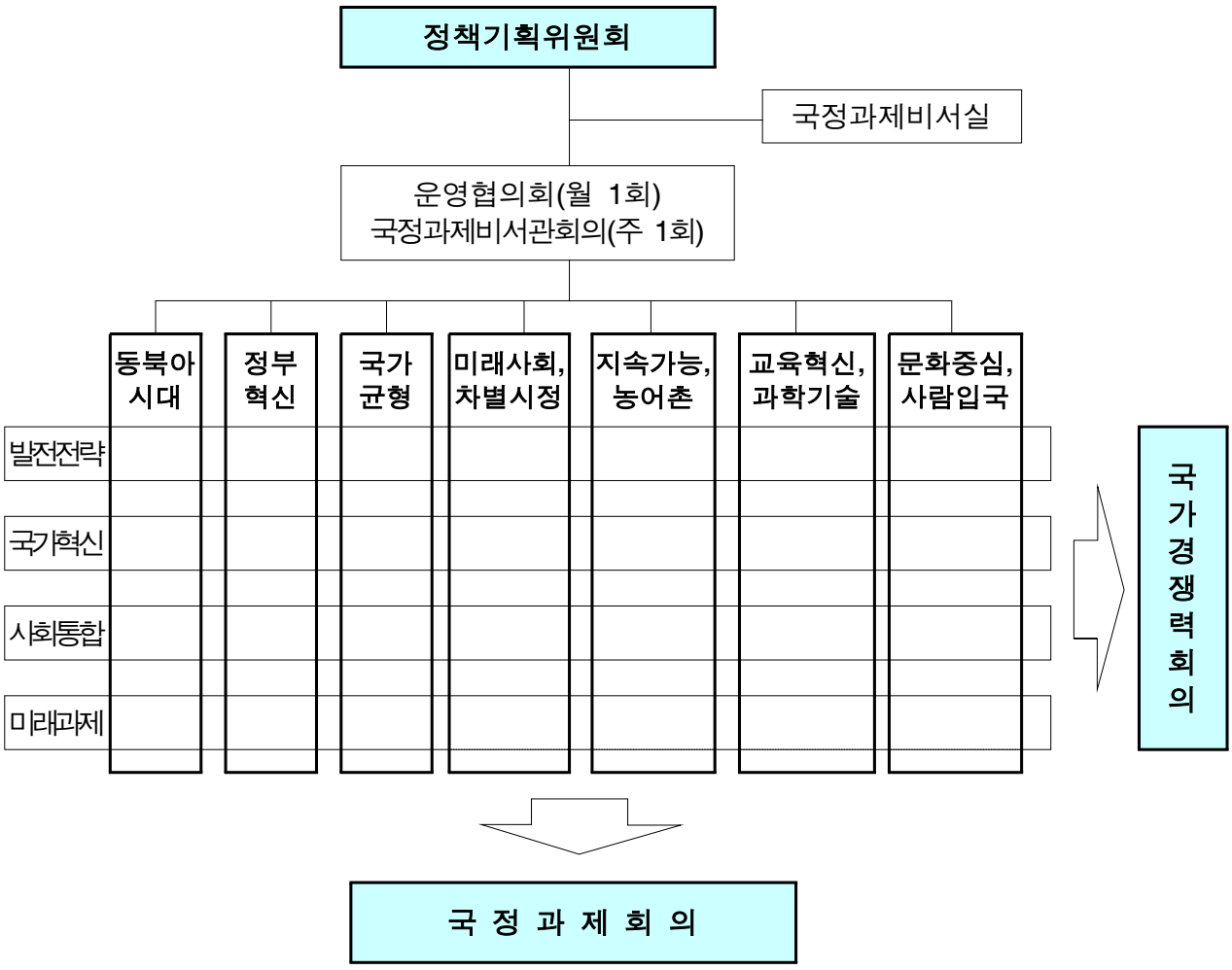
※ 단계별로 필요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3) 국가전략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縱的으로는 **국정과제**, 橫的으로는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 추진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조직**

○ 정책기획위원회가 11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 관리

〈참고〉 국정과제 추진 시스템



※ 정책기획위원회 주요기능

-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의 종합 관리·조정
- 국정과제회의, 국정과제조정회의 및 국가경쟁력회의 운영(대통령주재)
-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 등

3. 국정과제위원회 구성과 장점

(1) 개별 국정과제위원회 구성·운영

□ 산·학·연 **민간전문가**, **정부인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기획단)을 설치·운영

□ 국정과제의 추진단계별로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개별과제의 기획과 정책화작업**을 추진

〈 **국정과제 추진단계별 위원회 및 정부부처의 역할** 〉

- **기획단계** : 위원회의 기획과정에 부처가 실행가능성 등 사전검증작업 협조
- **정책화단계** : 위원회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부시행계획 마련
- **실행단계** : 부처가 중심이 되어 세부정책 추진

(2) 국정과제위원회의 장점과 효율성

□ **중장기 국가전략과제의 기획·관리에 효율적**

○ **정부부처**의 경우 그 특성상 주로 일상적인 **단기현안과제** 수행에 치중하여 **장기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

※ 장관 평균재임기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아 중장기 과제 수행이 더욱 어려움

□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신뢰도 제고**

○ 정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 **실현가능성**과 **신뢰도** 제고

□ **행정의 민주화와 정책결정의 공정성 확보 가능**

○ 부처이기주의, 보신주의 등 **관료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각 부문간 이견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의 **공정성 확보** 가능

4. 국정과제위원회 운영현황

(1) 조직 : 위원회의 업무, 기능 조정에 따라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

□ 11개 국정과제위원회 중 **지속가능위(00. 9월), 농특위(02. 1월)**는 이전 정부부터 운영 중

<예1>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해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04. 6. 21)
<예2>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부동산정책을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

(2) 인력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

□ 정책기획위와 11개 국정과제위의 전체직원은 **총 210명 내외**이며 **위원회당 평균 18명** 수준

○ **정부부처 인력**의 경우, **별도정원의 형태**로 파견 받고 있어 부처의 인력운영과 업무추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 04. 12월말 현재 정책기획위원회와 11개 국정과제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총 130명 내외(위원회당 평균 11명 수준)

(3) 예산 : 조직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편성·운영

□ 정책기획위원회와 11개 국정과제위원회의 05년 총 운영예산(안)은 **약 240억원**으로 위원회당 **평균 20억원** 수준

※ 일부에서는 05년 국정과제위원회 예산이 1,500억원에 이르며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문화중심도시위 **운영예산**에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사업예산**(1,007억원)을 포함시킨데 따른 오해에서 연유

□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점검해 나가고 있음

5. 주요 추진실적

◇ 지난 2년간 국정과제 로드맵 작업 추진,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참여정부 **균형발전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큰 틀**을 마련

○ 04. 12월 현재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중 **26개 과제**(신행정수도 관련 3개과제 제외)에 대한 **정책화작업을 완료, 부처 실행단계로 진입**

* **06년까지는** 100대 국정과제의 **정책화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절반수준인 48개과제**는 참여정부 **임기內에 실행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 04. 12. 15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지방교부세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 총 **26개 개혁입법 제·개정**작업을 완료

* 04. 12. 15 이후 한국투자공사법, 국민연금법, 갈등관리기본법 등 **총 37개 개혁입법 제·개정** 작업을 추진 중(별첨3)

◇ 05년에는 '참여정부 2년 평가작업'을 계기로 전체 로드맵의 절반이 넘는 **59개 국정과제의 정책화작업을 마무리**하여 부처가 실행할 수 있도록 작업추진을 가속화할 계획(06년까지 100대과제 전체의 정책화작업 완료)

○ 특히 05. 1월 **신행정수도 대안** 확정과 연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조기에 마련

○ 05. 상반기 중 **정부혁신·지방분권 관련 20개** 주요 핵심과제의 **정책화작업을 완료**하고, 점검평가체제로 전환

○ 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방안 마련 등 **低출산·고령화시대의 대응전략**을 구체화

○ **6대차별**(여성, 장애인, 학력, 연령,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시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1)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 및 국정과제조정회의 운영

□ 04.12월 현재 총 56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 **분야별 국정과제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

□ **지난 8월** 대통령주재 **국정과제조정회의를 신설**하여,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정과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 정책기획위원장, 국정과제위원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비서실내 관련 수석·보좌관 등 참석(04.11월말 현재 총 5차례 회의 개최)

(2) 주요 추진실적

□ **지방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21세기 국가경쟁력 기반 구축**

○ **양대 특별법 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 자립형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방침 마련
- 新활력지역(낙후지역) 선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등

□ **정부혁신·지방분권 작업의 가속화**

○ **정부기능 재조정**

- 금융감독체계 개편, 외교통상기능 강화방안 마련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소비자보호·공정거래기능 재조정 등

○ **정부운영시스템 효율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통합전산환경 구축

○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 중앙권한의 대폭 지방이양을 위한「**지방분권특별법**」제정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마련, 지방분권5개년종합실행계획 확정
- **재정분권을 위한 관련법률 정비** : 양여금제도 폐지, 교부세율 인상, 분권교부세 신설 등

□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 추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비전과 전략』마련

○ 3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 인천, 부산, 광양

○ 외국인투자제도 전면 개편 : Invest Korea 출범, 현금보조제 도입

○ 한국투자공사법(안) 마련,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 등

ƒñ[õj tÐ yte[\GFUµÄte,[\GFUµ4qóQMy ,

별첨2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현황

분 야	과제명	관계부처
【동북아시대위원회(13)】		
전략기획	1.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외전략	외교부, 통일부
	2. 동북아 구상 실현을 위한 대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통일부
평화구축	3.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전략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건교부
	4.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적 역량 강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5. 제주도의 동북아 평화거점화 대책	통일부, 외교부
번영 (경쟁력 강화)	6. 금융관련 제도개혁 및 인프라 구축	재경부, 금감위
	7. 금융분야에서의 동북아 역내 리더쉽 구축	재경부
	8. 공항만 확충 및 배후단지 개발	건교부, 해수부
	9.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기업·인력 육성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건교부 해수부, 관세청
	10.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재경부, 산자부
공동체 형성	11. 동북아 에너지·환경 협력	외교·산자·환경부
	12. 동북아 경제협력	외교부, 산자부
	13.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	외교부, 문화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3)】		
행정개혁	14.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및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감사원, 행자부 국조실, 예산처
	15.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및 민원제도 개선	행자부, 고충위
	16.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행자부, 법제처
	17. 시민사회와 협치기제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	행자부, 고충위
	18.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	행자부, 부방위
	19. 국가인사기능 통합과 자율·분권화	인사위, 행자부
	20. 자율적 혁신체계 구축 지원	행자부
인사개혁	21. 차별없는 균형적 인재등용 및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인사위, 행자부 예산처
	22. 투명·공정한 선발시스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체계 구축	인사위, 행자부 예산처
	23. 보수 합리화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	인사위, 행자부, 예산처

분 야	과제명	관계부처
전자정부	24.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행자부, 건교부 복지부 등
	25. 대 국민 서비스 고도화	행자부, 건교부 복지부 등
	26. 대 기업 서비스 고도화	행자부, 건교부 복지부 등
	27.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	행자부, 건교부 복지부 등
지방분권	28.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행자부, 교육부 감사원 등
	29.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부, 행자부 경찰청 등
	30.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행자부, 교육부 경찰청 등
	31.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행자부
	32. 지방의정활동기반 정비·강화	행자부
	33. 중앙-지방,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행자부, 교육부 감사원, 각 부처
재정세제	34. 세제개편	재경부, 행자부 예산처
	35.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제도 개선	행자부, 재경부 예산처
	3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자율편성 도입	예산처, 행자부 재경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16)】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혁신역량강화	37.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산자부, 교육부, 과기부, 행자부
	38.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	교육부, 산자부, 과기부
	39. 신산학협력 모델의 정립 및 확산	산자부, 교육부, 과기부 등
	40. 대덕 R&D 특구 육성	과기부, 산자부, 중기청
	41. 국가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	산자부, 과기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육성	42. 지역전략산업의 진흥	산자부
	43.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개발	문광부
	44. 낙후지역 개발방안 수립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분 야	과제명	관계부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45.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산자부, 전 부처
	46.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제도개선	예산처
	47.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체제 확립	전부처
	48.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재경부
국토 및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49. 신국토구상 수립·추진	건교부
	50.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건교부, 산자부, 재경부, 환경부
	5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건교부
	52.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산자부, 재경부, 건교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5)】: 헌재 위헌결정(04.10.21)으로 소관 로드맵 삭제		
신행정수도건설	*53. 추진체계 정비*	*건교부, 행자부*
	54. 주요국가기관 이전계획 및 건설기본계획 수립	*건교부, 행자부*
	55. 입지선정	*건교부*
	56. 개발계획 수립 및 건설사업 시행	*건교부*
	57. 국민공감대 확산	*국정홍보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9)】		
인구·가족정책	58. 고령사회대비 기본대책 및 재정확충방안 마련	복지부, 여성부
	59. 출산력 제고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	복지부, 여성부
	60.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복지부, 교육부
고용·인력대책	61. 고용제도 및 관행 개선	노동부
	62. 고용기회 확대 및 이민대책	노동부
보건복지대책	63.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 구축방안 마련	복지부
	64. 교육·여가·문화향상, 주거환경개선	복지부,문광부
	65.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	복지부
	66.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복지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6)】		
갈등관리정책	67.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국조실, 행자부, 환경부
	68. 대안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적용	국조실,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에너지·산업정책	69.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정책 수립	환경부, 산자부, 국조실
물·국토·자연정책	70.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	환경부, 건교부, 국조실
	71.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의 구축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농림부
지속가능발전전략	72.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교육부

분 야	과제명	관계부처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12)】		
서민주거 안정	73.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74. 주거복지정책 추진 지원	건교부
	75.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	재경부, 건교부
세원투명성 및 형평성 강화	76.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강화지원	재경부, 국세청
	77.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복지부, 국세청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78.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부, 복지부
	79.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복지부, 노동부
근로자 자산형성지원	80.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노동 · 재경 · 예산처
적극적 차별시정 추진	81. 5대 차별시정 로드맵 추진	노동·교육·행자부 등
	82. 적극적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	노동부
소외계층 보호지원 강화	83.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 지원	복지 · 교육 · 여성부
	84.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복지부, 건교부
【교육혁신위원회(4)】		
학교교육혁신	85. 학교교육체제 혁신	교육부, 복지부
대학교육혁신	86. 대학입학제도 개혁 및 대학교육력 제고	교육부
직업·평생교육혁신	87. 직업교육체제 혁신	교육 · 산자 · 노동부
지역교육혁신	88. 지역교육력 강화	교육부, 행자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5)】		
농업정책	89. 농업인력 정예화	농림부
	90. 농지제도 개선	농림부
	91. 쌀 산업대책	농림부
농가소득정책	92. 직접지불제 확충	농림부
농촌정책	93. 농촌사회 안전망 및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복지부, 농림부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5)】		
국가혁신체계 (NIS) 구축	94. 국가연구개발시스템 혁신역량 강화	과기,산자,정통부
	95.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혁신지원체제 구축	과기 · 산자 · 정통부
	96. 산학협력 및 기술혁신 확산체계 구축	교육,과기,산자부
	97.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혁신	교육부, 과기부 행자부, 산자부
	98. 과학기술혁신과 사회의 연계 강화	과기부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2)】		
사람입국	99. 직장내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여가 및 문화 생활 혁신	노동부, 문광부 농림부, 환경부
	100. 근로자 과로해소를 위한 근무시스템 개편	노동·재경·행자부 등

별첨3 국정과제 관련 주요 개혁입법 추진현황 (04.12.15 현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26개 개혁입법 제·개정 완료

	법 률 명
제정 (7개)	▪ 동북아시대(1) : 자유무역지역등의지정에관한법률 ▪ 정부혁신(3) : 지방분권특별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주민투표법 ▪ 국가균형(2)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 사회통합(1)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개정 (19개)	▪ 동북아시대(4) : 외국인투자촉진법, 화물자동차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정부혁신(7) :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폐지법, 기금관리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 사회통합(8)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상속세법 등 세법(4개), 지방세법, 세무사법

▣ 대덕연구개발특구법 등 총 37개 개혁입법 제·개정작업 추진 중

위원회	법 률 (안) 명	
	제정	개정
동북아시대 (5개)	한국투자공사법,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3개)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차), 화물유통촉진법(2개)
정부혁신 (17개)	지방일괄이양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정보기술관리혁신법, 개인정보보호법(5개)	지방자치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12개)
국가균형 (1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지정및육성에관한특별법(1개)	-
미래사회 (3개)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2개)	국민연금법(1개)
지속가능(1개)	갈등관리기본법(1개)	-
차별시정 (8개)	종합부동산세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2개)	근로자복지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부동산중개업법, 증권거래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6개)
농어촌(2개)	-	농지법, 양곡관리법(2개)
총 37개	**14개**	**23개**